

[종합·해설]

“기아차 파업 당장 끝내라”

현대차 21일만에 타결…계열사 기아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에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자, 기아차도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1일간의 장기파업 끝에 사측과의 올해 임금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현대차 노사는 26일 밤 울산공장에서 윤여철 사장(울산공장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고교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 7만665원(기본급 대비 5.1%)

“장기화땐 지역경제 타격”

지역민들 거센 철회 요구

인상, 호봉제 도입분 7천335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안에 잠정의됐다.

이로써 수출중단 사태까지 빚었던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근 한달(휴무일 포함)만에 종료돼 27일부터 완전 정상조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아차 노사간 협상은 8월 중순을 넘겨서야 겨우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돼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7~28일, 8월7~10일 6일동안 하루 4~8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뒤 8월10일 이후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노사간 간접은 기본급 10만6천 221원 인상과 성과급 300% 지급 외에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선

임 ▲노사동수 정경위원회 구성 ▲해외공장 신설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노사합의 요구 ▲자본변동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합과 합의 등이다.

회사측은 “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예상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사회 참여나 해외공장과 관련한 조합의 요구안도 회사의 본질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7일까지 광주공장 누적된 과업은 차량생산대수 532대, 매출 82억원에 달한다. 기아차 전체는 1천800대, 270억원을 올돌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기아차살리기와 기아차사주기 등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공장이 진정한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려면 당장 과업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광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아차 파업은 지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안타깝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이번 파업이 본부노조의 지침에 따른 것일지라도 광주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만큼 광주공장 민이더라도 연례적인 과업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0여개에 달하는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업체들은 “과업할 때마다 가슴이 칠렁한다”면서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 수년 전처럼 광주공장 장문에 가서 ‘파업 철회’를 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7·26 재·보선 이후 정국변화 5대 포인트

정치권 정계개편 급물살

7·26 재보궐 선거에선 탄핵의 주역이었던 조순형 민주당 후보가 성북을에서 당선됨에 따라 정계개편의 시계바늘이 더욱 빨리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계개편의 움직임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계개편의 움직임은 여당 의원들의 탈당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몰아칠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와 관련한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노무현 대통령 탈당 여부=노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중요 관전 포인트다. 노 대통령의 탈당은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미 “탈당은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올해 내내 실제 탈당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

된다면 노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성격상 나름대로 정계개편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노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고건 전 총리 움직임=‘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지 않는’ 고 전 총리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다음달 퇴임연대를 출범시키는 고건 전 총리는 일단 여야 정치권과 활발한 접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이전에 고건 전 총리가 정치적 선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의 탈당 등이 이뤄지며 정계개편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대철 열린우리당 고문 등 여권 인사들이 고 전 총리와의 대화 채널을 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고 전 총리의 발걸음을 재

촉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분당 가능성=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해체모여 형식의 정계개편 시나리오다. 여당 의원들이 탈당,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개혁 인사들과 함께 제3지대에 모여 새로운 당을 만들어 한나라당 후보와의 대선에서 일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일단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위치를 확인한만큼 정계개편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말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탈당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않겠다’며 상황이 된다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내분 가능성=가능성은 있지만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가능성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재·보선 결과를 놓고 이재오 최고위원 등의 비주류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로 강제섭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명박, 손학규 등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40%대에 육박하는 당 지지율 등을 감안한다면 내분의 시기와 규모는 여권보다 빠르거나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움직임=민주당은 우선 열린우리당 흔들기에 나서며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탈당을 유도하는 한편 고건 전 총리를 정계개편의 광장으로 끌어 내리려 할 전망이다.

여기엔 한 대표의 대법원 판결 시기와 결과도 정계개편의 변수다. 올해 내에 대법원에서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된다면 이는 민주당의 정계개편 발걸음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7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한화갑 대표가 조순형 당선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盧대통령 국민 질책 더 이상 외면 말라” 열린우리 초선의원 39명

“재·보선 국민의 요구 겸허히 수용”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7·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대통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미 민병두 양형일 장경수 의원 등 우리당 초선의원 39명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질책과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보선 결과로 나타난 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과 함께 하는 방안들에 대해 더 깊은 성찰과 고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도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초선 의원들의 인식을 나타낸 셈이다.

이들은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전략을 신속히 강구해야 하며, ‘비상체제’답게 결단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성명을 주도한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더 잘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는 말로, 당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과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희망21’ 소속 양형일 의원은 “김근태 비상체제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고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근태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 “정계개편 논의가 앞당겨지거나,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계개편 논의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역사와 정치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 성북을에서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당선으로 탄핵에 대한 국민적 재평가가 시작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초선 의원들의 성명에는 ‘처음처럼’, ‘국민의 길’, ‘희망포럼21’ 등 다양한 당내 모임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미국 취임을 위한 약학대학 입학지원생 모집

미국 고등학교 국제부 미국 학제대학을 입학하고 세계에서 인정하는 미국 학사가 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하는 학생들을 위한 미국 학제대학 입학지원 서비스입니다.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입니다.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 미국 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

미국 학제대학 입학 지원 및 학제대학 입학 지원